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그 시각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박정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그 시각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The Descrip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Perspectives on it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 Based on 2015 Revised-Curriculum

202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박정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그 시각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정 선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박정은

박정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손성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이정선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iv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쟁점과 시각 ...	4
제1절. 강제 동원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4
제2절. 남성 중심 사회 속 일본군 ‘위안부’	11
제3장.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17
제1절.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교과서 구성	17
제2절. 본문 서술 및 자료	21
제3절. 탐구활동	43
제4장. 맺음말	57
참고문헌	60

<표 목차>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18
<표 2> 3단원 본문 속 강제 동원 주체	22
<표 3> 3단원 본문 속 강제 동원 방법	23
<표 4> 리베르에 수록된 강제 동원 사례	25
<표 5> 3단원 본문 속 ‘위안소’ 설치시기	26
<표 6> 리베르에 수록된 사회적 낙인 자료	30
<표 7> 3단원 본문 속 사회적 낙인	30
<표 8> 해냄 본문에 수록된 피해자의 용기	31
<표 9> 4단원 본문 속 김학순의 공개 증언	33
<표 10> 고노담화 관련 본문 서술 및 자료	34
<표 11> 수요시위 관련 수록 자료	36
<표 12> 3단원, 4단원 탐구활동 구성 및 유형	43

<그림 목차>

<그림 1> 3단원 도입부에 수록된 그림	25
<그림 2> 3단원 본문에 수록된 사진 ①	28
<그림 3> 3단원 본문에 수록된 사진 ②	29
<그림 4> 씨마스에 수록된 김학순의 공개 증언	33
<그림 5> 씨마스 4단원 수록 자료	37
<그림 6> 미래엔 4단원 수록 자료	38
<그림 7> 동아 ‘역사특집’ 자료	40
<그림 8> 비상 3단원 탐구활동	45
<그림 9> 씨마스 3단원 탐구활동	46
<그림 10> 천재 3단원 탐구활동	47
<그림 11> 미래엔 3단원 탐구활동	50
<그림 12> 지학사 3단원 탐구활동	51
<그림 13> 해냄 3단원 탐구활동	53
<그림 14> 금성 3단원 탐구활동	54
<그림 15> 금성 4단원 탐구활동	55

ABSTRACT

The Descrip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Perspectives on it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 Based on 2015 Revised-Curriculum

Park Jeong-Eun

Advisor : Prof. Jeong-Seon Lee Ph.D.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arrative and its perspectives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based on academia's key issues and perspectiv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main issu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rced mobilizati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a male-dominated society. The two issues focus on nationalist and feminist views. However, they have developed into their respective forms and integrated into a view of human rights and peace to realize universal values and peace for humanity.

Textbooks also reflect academia's main arguments and perspectives, which is an educational curriculum and easy to confirm through the contents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The texts and materials in unit 3 emphasize the recovery of ethnic injuries and the pursuit of legal responsibilit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article and materials in unit 4 refer to the efforts and associated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fine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the issue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exual slavery and emphasize the aspects of human rights and peace.

The textbooks' efforts to expand their perspective and data can be confirmed through in-class further activities. More than half of the textbooks organizing these activities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body through these inquiry activities. However, these activities did not describe the brothel system, the prostitu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he basis of the 'comfort station' system. Some data related to the social stigma that could think about gender discrimination and awareness rampant in the male-dominated society, but it was also extremely limited.

To make up for this missing perspective, the researcher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erspective further through inquiry activities. Second, we need to integrate historical issues with other subjects so that students have a deep perspective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which is absent from the students. Focusing on the two improvement points proposed, the perspective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hould continue to expand.

제1장. 머리말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¹⁾는 만 29년의 역사를 채웠다.²⁾ 29년이라는 세월동안 수요시위가 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군 ‘위안부’(이하 ‘위안부’)³⁾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연대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축 단체로 활동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있었기 때문이다.⁴⁾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게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여 왔으며⁵⁾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 추모사업 뿐 아니라 전시 성폭력과 같은 전쟁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실시하여 왔다.⁶⁾

이러한 역사교육 측면에서의 노력은 교육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현

-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작되었다.
- 2) 정성조, 「수요시위 29주년...정의연 "피해자 존엄 위한 판결 기대"」, 『연합뉴스』, 2021년 1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104900004?input=1195m>, (2021년 1월 7일 검색).
- 3)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명칭에는 종군 ‘위안부’, 정신대,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이 있다. 종군 ‘위안부’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종군(從軍)의 의미가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정신대’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던 ‘근로정신대’의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연구 초기에는 ‘위안부’가 정신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종종 사용되었다. 일본군 성노예는 ‘일본군’이라는 범죄 ‘주체’와 ‘성노예’라는 범죄 ‘행위’를 명확히 지칭하고 있는 용어이기에 오늘날 정의기억연대나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노예라는 의미가 피해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당시에 발견되었던 군 문서 속 군 ‘위안부’라는 기록의 용어를 조합해 일본군 ‘위안부’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일본군을 ‘위안(慰安)’해주려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위안부’의 역사적 의미(위안이 아닌 성적 피해)를 강조하고자 “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현행법인 「일제하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 4) 2018년 7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통합 출범하여 ‘정의기억연대’가 되었다.
- 5) 수요시위가 처음 시작되었던 1992년에는 ① 강제연행 사실 인정, ② 공식사죄, ③ 진상규명, ④ 추모비 건립, ⑤ 배상, ⑥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아카데미, 2014, 128쪽, 1번 각주 참조).
- 6)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kr/visionmission/>, (2021년 1월 6일 검색).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 교과서만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없을 것이다. 역사 교과서는 “국가와 사회적 요구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연구의 진전에 따른 학문적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술 내용과 시각이 변화되어 왔다.⁷⁾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역사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크게 한·일 양국의 교육과정 및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와 한국의 교육과정 및 역사 교과서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한·일 양국의 역사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 및 특징을 분석한 이아현⁸⁾의 연구와 1997년과 2002년에 발행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을 비교·분석한 서경수⁹⁾의 연구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속 강제 동원 및 일제 강점기 여성 관련 서술이라는 주제로 ‘위안부’ 서술을 분석한 서민아¹⁰⁾, 권지민¹¹⁾, 최서연¹²⁾의 연구와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 체제와 내용의 특징을 분석한 임채원¹³⁾의 연구,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인한 갈등 및 해결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을 분석한 신지희¹⁴⁾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공통점은 교육과정 및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후, 교과서 서술 상의 개선사항이나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 중심의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기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의 내용 및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교과서에

7)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5, 19쪽.
 8) 이아현, 「역사교육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9) 서경수,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과 역사교과서 서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0) 서민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 강제연행 서술의 현황과 내용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1) 권지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분석과 교육 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2) 최서연,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여성관련 내용 분석 및 특징」,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3) 임채원, 「2007 개정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체제와 내용」,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14) 신지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제의 강제 동원’과 ‘동아시아 갈등 해결’에 관한 내용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서술되어 있는 시각 ‘외’의 측면을 확인해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수¹⁵⁾와 이경훈¹⁶⁾의 연구는 각각 한·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의 한계 즉 다양한 시각의 부재를 의식하며 지적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교과서 속 ‘위안부’ 서술이 여성, 인권·평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보충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또한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 여성, 인권·평화 등의 중층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학계의 연구 시각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역사 교과서 서술이 가지고 있는 시각 및 시각의 확장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역사 교과서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얼마나 의식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성과 및 시각을 얼마나 의식하며 확장시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의 2장에서는 ‘위안부’를 둘러싼 학계의 주요 쟁점을 강제 동원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남성 중심 사회 속 일본군 ‘위안부’라는 두 가지 유형과 시각으로 나눠 고찰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을 통해 고찰하였던 두 가지 쟁점과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본문 속 ‘위안부’ 서술 및 자료, 탐구활동의 구성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확장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5) 김선수,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전쟁사 서술 비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6) 이경훈, 「역사 부정의 파고 속,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역사와 교육』 제20호, 역사교육연구소, 2021.

제2장.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쟁점과 시각

제1절. 강제 동원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1980년대 말, 한국 사회가 꽃피운 민주화는 여성운동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¹⁷⁾ 여성운동의 성장과 함께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발족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업자의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불가하며,¹⁸⁾ 이후에도 강제 동원을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모르쇠의 태도로 일관하였다.¹⁹⁾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경험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고(故) 김학순이 등장하였다.²⁰⁾

김학순의 등장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정대협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진상규명 및 공식사죄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 장관의 담화(이하 고노담화)가 발표되었다. 고노 장관은 ‘위안소’ 설치·운영 경위 뿐 아니라 ‘위안부’ 동원과 이송 과정 속 일본군의 직·간접적 개입과 강제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였고,²¹⁾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육의 실시를 약속하였다.²²⁾ 하지만 일본 사회 내 우경화가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돌변하였고,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은 없었으며 강제성이 있었다고 해도 업자의 소행이므로 일본 정부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맞서기

1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아카데미, 2014, 16쪽.

18) 1990년 6월 6일, 일본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당시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 쓰타오(清水傳雄)의 발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 814, 상세 연표 1990년대 참조).

19) 1991년 4월 1일, 노동성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와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의 발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 814, 위의 연표 참조).

20) 고(故)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전, 고(故) 배봉기, 노수복의 증언도 존재하였지만, 국외 거주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 거주자로는 최초의 증언인 셈이다.

21) 1993년 8월 4일, 「내각관방 내각외정실의실 조사결과 발표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 814, 위의 연표 참조).

22) 1993년 8월 4일,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보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 814, 위의 연표 참조).

위해 학계의 연구는 ‘위안부’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계의 연구는 크게 “‘위안부’ 피해의 실태, ‘위안소’ 제도의 실태, 국제법적 고찰을 통한 법적 책임”²³⁾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연구의 핵심 쟁점은 강제 동원의 주체 및 방법, ‘위안소’ 설치·운영 경위, 국제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핵심 쟁점들은 고노담화 당시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기도 하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핵심 쟁점을 기준으로 삼아 한일 양국 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시 일본군은 ‘위안소’ 정책을 기획하고 ‘위안부’ 모집 지시를 내린 주체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일본군의 관여를 증명하고 있는 공문서들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야전 주보 규정 개정에 관한 건」(1937)²⁴⁾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안 1조에서는 “야전 주보에서는 전항 외에 필요한 ‘위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6조에서는 “평시에 위수지에서 데리고 오는 주보 청부인은 군속으로 취급하여 일정한 복장을 입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 1조와 6조의 규정을 통해 야전 주보에 ‘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주보 청부인, 즉 ‘위안소’ 업자의 신분이 군속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문서의 제정 및 개정은 일본 육군성에 의한 것이었고, 살펴본 바와 같이 육군성이 ‘위안소’의 설치 및 업자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소’는 육군성의 기획으로 설치되었던 병참시설이었으며,²⁵⁾ 육군성이 ‘위안소’ 제도에 관여하고 있었던 주체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1938)²⁶⁾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는 파견군 참모장에게 “‘위안부’ 모집 등에 있어서는 파견군이 통제하고 이를 맡길 인물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며, 그 실시는 관계 지방의 헌병이나 경찰 당국과 연계를 긴밀히 하고 … 명령에 의거해 통첩한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위안부’ 모집을 위탁할 업자의

23) 현대송(玄大松) 편,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2008, 208쪽.

24) 1904년에 제정된 「야전 주보 규정」을 개정한 문서, 야전 부대의 편제와 전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37년 9월 29일에 개정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 814, 형태별 문서 「야전 주보 규정 개정에 관한 건」 번역문 참조).

25)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wc.d_001_0010_2600, (2021년 1월 20일 검색).

26)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기안한 문서로, 요시미 요시아키가 발견하여 공표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 옮김), 『중군위안부·자료집』, 서문당, 1993, 134쪽).

선정 및 업자와 헌병·경찰 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한 기관 또한 일본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즉 ‘위안소’를 제도화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지시한 총체적 주체는 일본군이었던 것이다.

조선에서의 강제 동원은 취업사기 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취업사기(47%), 협박·폭력(35%), 유괴·납치(3%), 인신매매(2%) 등의 방법으로 강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렇듯 취업사기 형태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적 요인이었던 가부장제와 빈곤이 동원 수단으로 이용된 탓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헌병이 집으로 쳐들어가서 끌고 가는 강제성은 없었다.’²⁹⁾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가 동원 과정에서의 강제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강제성 또한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에 의한 물리적 형태의 동원보다 취업사기 형태의 동원이 많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며 강제 동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성은 물리적 형태의 동원 뿐 아니라 사기, 유괴·납치 등을 포함한 자신의 의사에 반(反)한 상황 전체를 의미하므로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³⁰⁾ 강제성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원 과정에서의 강제성 뿐 아니라 이송 과정 및 ‘위안소’ 내에서 발생하였던 강제적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위안부’들이 이송되었던 ‘위안소’는 1932년 1월, 제 1차 상해(상하이)사변 당시 상해에 파견되었던 일본 해군에 의해 설치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해군 ‘위안소’를 모방한 육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는데,³²⁾ 이렇듯 1932년대에 설치된 육·해군 ‘위안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안소’의 원초적 형태이자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³⁾ 당시 육군 ‘위안소’ 설치 담당자이자 상하이 파견군이었던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참모부장은 점령

27)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1998, 47쪽.

28)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66쪽.

29)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https://www.archive814.or.kr/Chronology/List>, (2021년 3월 1일 검색).

30) 정진성, 위의 책, 53쪽.

31) 강정숙,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26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47쪽.

32) 윤명숙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105~106쪽.

33) 정진성, 위의 책, 33쪽.

지 내에서 발생하는 일본군의 강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 ‘위안소’를 설치하였음을 회상하였고,³⁴⁾ 오카베 나오자부로(岡部直三郎) 참모장 역시 자신의 일기를 통해 “요즘 사병들이 여자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허가하여 사병의 성 문제 해결책에 관해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그 실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³⁵⁾ 이를 통해 일본 육군성의 고위 간부층은 강간 사건을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위안소’ 설치를 기획하고, 시행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로 대규모의 병력이 중국으로 투입되자, 분산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안소’는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설치되기 시작하였다.³⁶⁾ 독립공성 중포병 제2대대의 「상주 주둔간 내무규정」(1938)³⁷⁾에는 ‘위안소’ 경영자에게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본군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는 기록과 부대별 ‘위안소’ 이용 요일·시간·요금, 정기적인 성병 검진 일정, ‘위안소’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일본군이 별도의 감독 담당 부대를 두어 ‘위안소’ 내의 ‘위안부’들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³⁸⁾

이렇듯 ‘위안부’들은 통제된 시스템 속에서 성교를 강요당했으며, 성교를 거부하게 되면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기록 상 ‘위안부’들의 휴일은 월 1회로 지정되어 있었지만³⁹⁾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거주 및 외출, 산책의 자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⁴⁰⁾ ‘위안부’들이 ‘위안소’ 내에서 처해있었던 강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한편 ‘위안소’ 내에서 ‘위안부’들은 민족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예로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치안이 안정된 지역의 ‘위안소’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가 모두 배치되었지만”⁴¹⁾

34)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28쪽.

35) 『岡部直三郎大將の日記』, 1932年 3月 14日 付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28쪽).

36) 정진성, 앞의 책, 36쪽.

37)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 옮김), 앞의 책, 196쪽.

38) 현대송(玄大松) 편, 앞의 책, 216쪽.

39) “매월 15일은 ‘위안소’의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 옮김), 앞의 책, 197쪽).

40) 요시미 요시아키 (남상구 옮김),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13, 78쪽.

41)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 142쪽.

위험한 지역의 ‘위안소’에는 주로 조선인 ‘위안부’가 배치되었다. 또한 일본인 ‘위안부’는 대부분 장교용 ‘위안소’로, 조선인 ‘위안부’는 사병용 ‘위안소’로 배치되었는데 장교용의 경우 일일 7~8명, 사병용의 경우 일일 20~30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⁴²⁾ ‘위안소’ 이용 요금 또한 장교용에 배치된 일본인 ‘위안부’는 2엔 50전, 조선인 ‘위안부’는 2엔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사병용은 각각 2엔과 1엔 50전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⁴³⁾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는 민족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이러한 일본인과 조선인 ‘위안부’의 민족차별은 성 경험 유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트럭섬⁴⁵⁾으로 이송되었던 한 일본인 여성은 성병 검진 과정 중 성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귀국 조치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 실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⁴⁶⁾

이러한 민족차별의 흔적은 당시 일본 정부가 비준하고 있었던 국제법의 연령 규정 위반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제법 위반 행위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거스른 행위이기도 하기에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⁴⁷⁾

1921년, 일본 정부는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21)에 비준하였는데 해당 조약은 당사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21세 미만인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성년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협박·폭력, 권력 남용 등의 강제적 수단이 이용되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었다.⁴⁸⁾ 일본 정부는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성 경험이 있는 21세 이상의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하려 노력하였는데⁴⁹⁾ 이러한 노력은 일본 내에서만 해당하였다.

식민지는 제외한다는 유보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⁵⁰⁾ 유보 조항으로 인

42)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151~152쪽.

43)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141~142쪽.

44)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142쪽.

45)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4개의 주(州) 가운데 하나이다.

46)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143~144쪽.

47)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177쪽.

48)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175쪽.

49) 현대송(玄大松) 편, 앞의 책, 217쪽.

50)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178쪽.

해 조선은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한 주요 공급지가 되었고,⁵¹⁾ 성 경험이 없는 21세 미만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중 89%에 해당하는 수치로⁵²⁾ 일본 정부가 당시 비준하고 있던 국제법의 연령 규정과 유보 조항을 인지하고 악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보 조항이 존재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보 조항은 식민지의 관습과 관행을 배려하기 위함이지, 무조건적 제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⁵³⁾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이송 시 일본 국적의 철도나 선박을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일본 국적의 운송 수단은 국제법상 일본 영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 출신의 미성년 여성을 이송한 것은 일본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⁵⁴⁾

또한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 여성의 국적 또한 일본에 속했다.⁵⁵⁾ 그러므로 도항 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던 총독부 관할의 경찰서에서 도항을 앞둔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면 엄연히 국제법의 연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발급해준 것이라고 해도 연령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총독부의 직무 유기 행위라고 지적할 수 있다.⁵⁶⁾

이렇듯 당시 국제법 규정의 근거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법의 고찰은 당시 현행법에 의존하고 있어 “식민지배 및 식민지 범죄의 성격에 대한 이해”⁵⁷⁾가 결여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위안부’에게 가해졌던 범죄 행위의 본질인 전쟁범죄 즉 전시 성폭력과 성노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접근법이 ‘인도에 반한 죄’이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 제 7조에 의거해 재판소의

51)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176쪽.

52) 윤명숙 (최민순 옮김), 앞의 책, 110쪽.

53) 강정숙, 앞의 논문, 48쪽.

54)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178~179쪽.

55) 이은진, 「‘위안부’ 문제는 무슨 죄목으로 어디에 소장을 내야할까?」, 『일다』, 2021년 5월 9일, <https://m.ildaro.com/a.html?uid=9035&sc=sc1>, (2021년 11월 3일 검색).

56)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52쪽.

57) 이은진, 위의 기사, <https://m.ildaro.com/a.html?uid=9035&sc=sc1>, (2021년 11월 3일 검색).

관할권이 인정되는 중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비인도적·박해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⁸⁾

비인도적 행위라 함은 “살해”,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사람들의 실종”,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⁵⁹⁾가 모두 포함된다.

즉 앞서 언급된 비인도적 행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해졌던 피해의 실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 성폭력과 성노예 문제까지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인도에 반한 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새롭게 간주된 개념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는 전전 또는 전시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비인도적·박해 행위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므로 일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적용시킬 수 있다.⁶⁰⁾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생했던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 또한 인도에 반한 죄로써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및 우익 세력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의 공개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행위까지도 범죄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58) 김영석,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55쪽.

59) 김도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ICC규정 이행법률에 따른 검토」, 『JEONBUK LAW JOURNAL』 제5권 제1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2015, 83쪽.

60) 윤명숙 (최민순 옮김), 앞의 책, 88쪽.

61)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및 정보공개 거부 행위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김영석, 위의 논문).

제2절. 남성 중심 사회 속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확장되어 감에 따라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게 될 경우, 일본의 가해 행위로 발생한 식민지 민족의 피해 회복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한·일 역사 갈등 및 외교 관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⁶²⁾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사과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근본적인 피해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기존의 민족주의 시각을 비판하며 ‘위안부’ 문제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로 바라보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전시에 ‘위안소’ 제도가 시행되고,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문제의 근간을 공창(公娼) 제도로 보고 있다.⁶³⁾ 공창 제도는 국가가 매춘 행위를 합법적으로 용인 및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자를 통해 세금을 받는 성매매 제도이다. 즉 여성의 성(性)이 국가의 통제 아래 관리되고 도구화 되는 제도인 셈이며, 그 기저에는 필요에 의해 ‘여성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남성 중심적 성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⁶⁴⁾ 일본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된 공창 제도는 국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가 조선 사회 내에 성행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⁶⁵⁾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을 공급하는 체계는 취업사기나 인신매매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러한 공급체계가 이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가부장 사회 속에서 여성은 집안을 위해 마땅히 희생될 수 있는 존재였고, 여성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복종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현실이었다.⁶⁶⁾ 이러한 사회의 현실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려 작용하였는데 당시 조선은 심각한 자연재해의 피해 뿐 아니라 식민지 자원 수탈 정책의 강화로 농촌 경제의 빈곤이 장기화된 상황이었다.

빈곤으로 쌓인 빚은 여성을 성매매 현장에 묶어두는 강력한 도구이자 인신매매의 핵심이 되었고,⁶⁷⁾ 취업사기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 되

62)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 활동의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80쪽.

63)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 2012, 50쪽.

64)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옮김), 위의 책, 51쪽.

65) 정진성, 앞의 책, 65쪽.

66) 윤명숙 (최민순 옮김), 앞의 책, 292쪽.

었다.⁶⁸⁾ 이러한 공급체계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어 활용되었다.⁶⁹⁾ 즉 성매매 업소의 여성 공급체계와 ‘위안부’ 강제 동원의 수단이 동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부장제와 빈곤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안소’에 수많은 여성들이 공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매매 업소 즉 공창 업주의 업종 변경 또한 자리 잡고 있었다. 1930년대에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침체기를 겪던 공창 업주는 군인을 상대로 한 전쟁터로 활동 무대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시기는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위안소’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던 때라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상인과 ‘위안소’ 경영자의 도항이 우선시”⁷⁰⁾되고 있어 공창 업주가 활동 범위를 넓히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 일본군 또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경영을 기존의 공창 업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즉 기존의 공창 업주가 ‘위안부’를 모집하는 업자이자 일본군의 위임을 받아 ‘위안소’를 위탁·운영하는 경영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⁷¹⁾

주지하였듯 강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하였던 일본군은 여성의 가치를 처녀성과 정조라는 기준에 두고, 모성의 역할을 수행할 여성과 아닌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⁷²⁾ 일본인과 다르게 조선인 여성은 성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로 동원되었는데 이는 “성병이 없어 건강하고 젊은 여성이야말로 ‘위생적 공동변소’로 유용하다는 인식”⁷³⁾과 일본 사회처럼 가부장 사회였던 식민지 조선 여성의 민족성과 모성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⁷⁴⁾

조선인 여성의 모성을 말살시키려는 목적과 달리 일본인 여성은 황국신민을 낳아 기르는 모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⁷⁵⁾ 국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온 일본군 장병의 성적 위안은 중요하다고 주장되었지만, 위안을 제공해주는 대상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여성, 예컨대 장병의 가족·친지·애인이 라면 천황과 국가를 위해 싸우는 장병의 신뢰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

67) 캐롤라인 노마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열다북스, 2020, 150쪽.

68) 정진성, 앞의 책, 285쪽.

69) 정진성, 앞의 책, 283쪽.

70) 윤명숙 (최민순 옮김), 앞의 책, 483쪽.

71) 윤명숙 (최민순 옮김), 앞의 책, 485쪽.

72)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145쪽.

73)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옮김), 앞의 책, 245쪽.

74) 정진성, 앞의 책, 286쪽.

75) 정진성, 앞의 책, 280쪽.

로76) 모성의 역할에서 제외된 공창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하였다.77) 이는 ‘위안소’에 공창 출신 일본인 ‘위안부’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78)

이를 두고 일본의 우익 세력은 ‘위안부’는 공창 즉 매춘부였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매춘이라는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79)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일본과 조선의 가부장 사회 속에서 자유의사를 존중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매춘부였던 여성은 ‘위안부’로 소비되어도 괜찮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위안소’를 긍정하는 “‘위안소’ 긍정론에 합류”80)하는 셈이다.

또한 우익 세력의 발언대로 피해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매춘부가 된 것이라면 매춘 행위를 중단하고 싶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부여된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성교를 거부하면 극심한 폭력이 가해졌으며, 자신을 고용한 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빚을 갚지 못하면 매춘 행위를 그만둘 수 없는 성 노예적 채무 상황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81) 그러므로 공창 출신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고 해서 자유의사가 반영된 행위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일본인 ‘위안부’는 공창이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순결한 소녀였다는 인식의 이분화는 매춘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익 세력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다.82) 공창 여성이었던 순결한 소녀였든,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모든 여성은 남성이라는 지배 권력과 성 착취의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자 성노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성 경험의 유무로 피해의 위계(位階)를 규정지을 수는 없다.83)

하지만 일본군의 패전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가부장 사회 속에서 정조를 잃었다는 사실은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제였고,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84)

76) 캐롤라인 노마 (유혜담 옮김), 앞의 책, 266~267쪽.

77) 정진성, 앞의 책, 83쪽.

78)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144쪽.

79)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앞의 책, 9쪽.

80)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7쪽.

81)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옮김), 앞의 책, 93쪽.

82) 김정란, 앞의 논문, 91쪽.

83)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앞의 책, 5쪽.

84) 정진성, 앞의 책, 290쪽.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이 가족의 냉대를 받거나⁸⁵⁾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쫓겨나게 만들었으며, 정상적인 임신 기능을 상실해 대를 이을 자식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게 만들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례는 당시 조선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과 인식뿐 아니라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침묵해야 했던 원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즉 피해자들에게 새겨진 사회적 낙인은 가족과 국가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스스로 침묵을 택하게 만들었다.⁸⁶⁾

이렇듯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당한 피해자들의 남겨진 삶의 목적은 생존이었다. 차가운 사회의 시선 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마저 힘들었던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성 착취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⁸⁷⁾ 일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결국 여성을 향한 남성 중심적 성 관념과 성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오랜 침묵의 세월을 지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였던 고(故) 김학순의 ‘용기’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침묵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⁸⁸⁾ 김학순의 용기에 힘입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피해자들은 ‘위안부’ 피해 경험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였던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 속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되지 않았다.⁸⁹⁾ 여전히 한·일 양국의 피해와 가해의 구조만 집중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이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시각의 확장 속에서 수요시위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이하 2000년 법정)이 열리게 되었다.

8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윤심은 어머니에 의해 친척집에 맡겨졌으며, 또 다른 피해자 문옥주는 ‘위안부’ 피해 경험을 가족에게 털어놓았지만 배척당했다 (김정란, 앞의 논문, 52쪽).

86) 김정란, 앞의 논문, 50쪽.

8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악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생존을 위해 유곽 생활을 하였고 미군 기지촌에서의 색시장사, 양키물건 장사, 술장사, 밥장사, 식모살이 등의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8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59쪽.

89)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 6월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6쪽.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되었다. 1992년에는 정대협과 정대협의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며 주관을 맡았지만, 1993년부터는 회원단체 뿐 아니라 국내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의 연대로 확장되어 나갔다.⁹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과거사 청산 뿐 아니라 전쟁범죄로 비롯되는 비극과 여성 차별, 인권 침해, 평화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한·일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⁹¹⁾

물론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내의 가부장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드러내며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며 활동해나갔다.⁹²⁾ 그 결과, 오늘날 수요시위는 연대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도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역사교육의 현장”⁹³⁾으로 거듭나 “나와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고 만들어 가게 해주는 공간”⁹⁴⁾이 되었다.

2000년 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민간법정으로 전시 성폭력 문제를 단죄해야 할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확립시킴으로써 국제적 연대활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 일본 정부에게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적이 결합되어 개최되었다.⁹⁵⁾ 물론 2000년 법정이 열리기 이전에도 국제사회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었다.⁹⁶⁾ 그 결과물이 1996년과 1998년에 유엔(UN) 인권위원회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이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게이 맥두걸 보고관의 보고서(이하 맥두걸 보고서)이다.⁹⁷⁾

쿠마라스와미와 맥두걸의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성노예제와 전시 성폭력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맥두걸 보고서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불(不)처벌의 연쇄를 끊기 위해 형사 책임의 추궁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⁹⁸⁾에서 높은

9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130쪽.

9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133쪽.

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137쪽.

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135쪽.

94) 박정애,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20, 85쪽.

9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192~193쪽.

96) 정진성, 앞의 책, 193쪽.

97) 현대송(玄大松) 편, 앞의 책, 121쪽.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법적 해석과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결과물이 2000년 법정이기도 했다.⁹⁹⁾

2000년 법정의 최종판결은 히로히토(裕仁) 천황에 대한 유죄 선고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시 하 여성에게 행해지던 폭력은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¹⁰⁰⁾ 이는 ‘위안부’ 문제가 전시에 발생하는 여성 인권 침해 문제의 근간으로 인식되면서 ‘위안부’ 문제의 현재성이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¹⁾

즉 2000년 법정은 피해국 여성들과 민간단체, 국제사회의 연대 속에서 이뤄진 결과물임과 동시에¹⁰²⁾ 전시 성폭력의 실태를 젠더 즉 여성의 시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¹⁰³⁾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2000년 법정을 통해 갖춰진 남과 북 그리고 재일교포의 연대와 협력은 “양측의 목적이 같고, 신뢰를 가질 때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¹⁰⁴⁾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수요시위나 2000년 법정과 같은 연대의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위안부’ 피해 경험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던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와 성 관념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침묵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이를 깨고 나온 김학순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침묵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즉 피해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발전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다.

98) 김부자 외,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민속원, 2018, 209쪽.

99) 정진성, 앞의 책, 194쪽.

100) 김부자 외, 위의 책, 206쪽.

101) 정진성, 앞의 책, 196쪽.

102) 정진성, 앞의 책, 209쪽.

103) 김부자 외, 위의 책, 213쪽.

104) 정진성, 앞의 책, 210쪽.

제3장.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제1절.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교과서 구성

3장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일본군 ‘위안부’ 본문 서술 및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해를 지향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¹⁰⁵⁾ 즉 ‘계열화(系列化)’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¹⁰⁶⁾ 계열화란 선행 학습을 기초로 후속 학습을 전개하는 과정이며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⁷⁾ 따라서 중등교육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한 서술과 시각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¹⁰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나 저작자가 교육과정 및 편찬 상 유의점 등을 참고해 편찬·발행한 도서로, 교육부 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교과용 도서를 의미한다.¹⁰⁹⁾ 현재 검정에 합격하여 발행된 교과서는 (주) 금성출판사, (주) 동아출판, (주) 리베르스쿨, (주) 미래엔, (주) 비상교육, (주) 씨마스, (주) 지학사, (주) 천재교과서, (주) 해냄에듀 총 9종으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되었다.

본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은 2018년부터였으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건과 시기가 맞물려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¹¹⁰⁾ 2020년에는 8종의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한 상태였으며, 2021년에는 리베르가 추가 검정에 합격하여 총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었다.¹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정에 합격한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위안부’에 대한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보려 하며, 각 출판사의 교과서를 언급하게 될 때에는 편의를

105)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4]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의 일부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164-165쪽.

106)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2007, 34쪽.

107) 최상훈 외, 위의 책, 97쪽.

108)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중간단계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의미한다.

109)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 http://www.ktbook.com/info/info_02_02.asp, (2021년 11월 6일 검색).

110) 이경훈, 앞의 논문, 72쪽, (21번 각주 참조).

111) 이경훈, 앞의 논문, 73쪽, (23번 각주 참조).

위해 출판사의 이름으로만 서술하려 한다. ‘위안부’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은 각각 3단원과 4단원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3단원과 4단원의 교육과정 구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¹¹²⁾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¹¹³⁾

대 단원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Ⅳ. 대한민국의 발전
성취기준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10한사04-08] 남북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소주제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학습요소	일제의 침략 전쟁, 2차 세계 대전, 민족 말살 통치, 전시 수탈과 일상적 궁핍, 일본군 ‘위안부’	북한 사회 변화, 평화 통일 노력, 남북 정상 회담,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을 주제로, 일본 정부에 보내는 편지 글쓰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징용·징병 피해자 등의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는지를, 더 나아가 한일 간 역사적 갈등 속에 내재된 주장이나 쟁점을 인식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입장에서 소감문 혹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모듈별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신문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 과정은 각 시기별로 나누어 경제 성장의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시행

112)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의 일부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48~153쪽.

113) 본고의 <표 1>은 이경훈의 논문 <표 1>을 통해 모티브를 얻었다 (이경훈, 앞의 논문, 72쪽).

		<p> 하거나, 모둠을 편성하여 산업별 경제 성장 과정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
--	--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3단원과 4단원의 대단원명, 성취기준, 소주제, 학습요소¹¹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하 평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원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대단원명과 함께 “1910년 국권 피탈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직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 전시 동원 체제가 초래한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항일 투쟁 과정에서 건국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을 파악한다.”¹¹⁵⁾라는 대단원 개관이 서술되어 있다.

대단원명과 대단원 개관을 통해 3단원은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에 대해 학습하는 단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단원은 교과서에서 ‘위안부’가 처음 등장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위안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서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취기준 속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식민지 조선인의 삶에 대한 사례 중 하나로 ‘위안부’에 대한 사례가 구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이라는 소주제와 ‘위안부’라는 학습요소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원의 평가 방법은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이라는 주제 아래, ‘위안부’, 징용·징병 피해자들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게 편지 글쓰기 평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해당 활동의 목표는 ‘위안부’, 징용·징병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강제 동원으로 변화하게 된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단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단원명과 함께 “1945년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다룬다. …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및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¹¹⁶⁾라는 대단원 개관이

114) 본고의 <표 1>에서는 소주제와 학습 요소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의 일부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49쪽을 확인해보면 학습 요소 항목 안에 소주제가 함께 게재되어 있다. (학습 요소=소주제)

115)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의 일부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48쪽.

116)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의 일부개정) 사회과

서술되어 있다. 4단원은 대단원명과 대단원 개관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과정과 남북 화해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단원임을 알 수 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4단원에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될 것임을 짐작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4단원의 성취기준, 소주제, 학습요소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란 각각의 내용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 중 하나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4단원은 3단원과 달리 ‘위안부’가 학습요소로 직접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화해의 과정이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서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 방법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및 이해’를 주제로 소감문, 인터뷰, 역사 신문, 포트폴리오 제작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이나 자료, 활동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3단원과 4단원의 본문 서술 및 자료, 탐구활동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문과 탐구활동을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동일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단원 제목, 성취기준(학습목표), 도입활동, 본문·학습활동, 평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학습활동은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¹¹⁷⁾ 본문을 통해 학습한 역사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 즉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¹¹⁸⁾ 이러한 교과서 구성 체제에 따라 본문 서술 및 자료의 시각을 먼저 분석한 후, 탐구활동의 시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150쪽.
 117) 최상훈 외, 앞의 책, 111쪽.
 118) 교육과정평가원, 「역사과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8, 13쪽.

제2절. 본문 서술 및 자료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강제 동원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남성 중심 사회 속 일본군 ‘위안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위안부’의 피해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도에 반한 죄’라는 개념을 확립해 인권·평화의 시각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비롯된 여성 차별적 성 관념과 인식을 ‘위안부’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하였으며 ‘위안부’를 전시 성폭력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며 인권·평화의 시각을 강조하였다.

즉 두 가지 쟁점은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의 시각을 지니고 있지만, 각각의 형태로 발전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통합되고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쟁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3단원과 4단원, 본문 서술 및 자료가 가진 시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표 1>을 통해 살펴보았듯 3단원은 ‘위안부’가 처음 등장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강제 동원의 주체에 대한 서술이다.

9종의 교과서 중 리베르와 지학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가 강제 동원의 주체를 ‘일제’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인적 자원을 수탈한 주체를 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1938)을 기반으로 식민지 조선인의 전투 병력과 노동력을 수탈하였고, 그로인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징용·징병, 여자근로정신대의 이름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 수탈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주체 또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안소’는 일제의 수많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당시의 육군성, 즉 ‘일본군’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일본군은 ‘위안소’ 제도를 기획하고 ‘위안부’ 모집을 지시한 총체적 주체인 셈이며, 일제는 이러한 일본군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존재이다. 따라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주체를 서술할 때는 포괄적 의미의 ‘일제’보다는 ‘일본군’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분하여 서술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늘날 한국 정부와 정의연, 국제사회가 ‘위안부’를 지칭할 때 범죄 주체인 일본군을 명기하는 이유는 범죄 주체를 명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리베르와 지학사의 본문이 강제

징용·징병, 여자근로정신대의 강제 동원 주체를 일제라고 서술하다가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에서 일본군으로 바꿔 서술한 것 역시 위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일본군이라는 범죄 주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3단원 본문 속 강제 동원 주체

출판사	강제 동원 주체 : 일제
금성	일제 의 인적 수탈은 여성을 대상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어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다.
동아	한편 일제 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미래엔	수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보내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성노예로 삼았으며, 전쟁 막바지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만들어 수십만 명의 여성을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비상	한편, 일제 는 10대 여성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남양 군도 등지의 전쟁 지역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씨마스	한편, 일제 는 1930년대 초부터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 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천재	일제 는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한국 여성들도 공장 등에 동원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다.
해냄	일제 는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여성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의 성 노예로 삼았다.
출판사	강제 동원 주체 : 일본군
리베르	만주 사변 당시부터 일본군 은 전쟁터에서 위안소를 운영하였다. 일본군은 조선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지학사	한편, 일본군 은 만주 사변 시기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4쪽 ;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동아출판, 2020, 195쪽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20, 212쪽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비상교육, 2020, 212쪽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

사, ㈜ 씨마스, 2020, 218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천재교육, 2020, 219쪽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2020, 210쪽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리베르스쿨, 2021, 209쪽 ;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지학사, 2020, 207쪽.

강제 동원의 방법 즉 형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미래엔을 제외한 8종의 교과서가 있다.¹¹⁹⁾ 8종 중 리베르와 해냄을 제외한 6종의 교과서가 강제 동원의 방법을 ‘강제동원’, ‘동원’, ‘끌고 가(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끌려갔다’라는 서술은 강제성을 좁은 의미로만 해석한 것으로 물리적 형태의 동원만 강조하는 셈이기 때문에 적절한 서술이라고 보기 힘들다.

강제 동원은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취업사기,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으며, 어떠한 형태로 동원되었든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反)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성의 범주를 넓게 적용시켜야 한다.¹²⁰⁾ 특히 강제성은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에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며¹²¹⁾ 어떠한 경우든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지시 및 개입 여부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이를 강조하는 별도의 서술을 덧붙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3> 3단원 본문 속 강제 동원 방법

출판사	강제 동원 방법 : 좁은 의미의 강제성
금성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 되어 ...
동아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 하여 ...
비상	10대 여성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 전쟁 지역으로 끌고 가 ...
씨마스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노예 생활을 ...
지학사	수많은 젊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 하였다.
천재	또한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다 .
출판사	강제 동원 방법 : 넓은 의미의 강제성
리베르	일본 관헌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 하거나 유괴 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민간 모집책들이 취업 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

119) 미래엔은 3단원 본문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보내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성 노예로 삼았으며.”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미래엔, 2020, 212쪽).

120) 정진성, 앞의 책, 53쪽.

121) 임채원, 앞의 논문, 30쪽.

	...
해냄	이들은 주로 일자리를 주선했 준다는 취업 사기 에 속아 끌려갔으며, 유괴나 강제 연행 의 방식으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4쪽 ;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동아출판, 2020, 195쪽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비상교육, 2020, 212쪽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218쪽 ;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지학사, 2020, 207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19쪽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21, 209쪽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210쪽.

한편 금성, 리베르, 천재는 강제 동원의 주체 및 동원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금성은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상처’라는 소단원 제목 아래 고(故) 김순덕의 그림, 「끌려감」과 ‘그림 속의 여성은 누구에 의해, 어디로 끌려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제목 중 ‘일제 강점기’라는 부분과 ‘끌려감’이라는 작품명, 그림 속 공포에 질린 여성의 표정은 제시된 질문의 답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금성처럼 본문 도입부에 수록된 자료는 아니지만, 천재 또한 중단원 표지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린 「배를 따는 일본군」, 「끌려감」,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그림¹²²⁾과 ‘아래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할머니들이 이를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금성과 천재가 본문 및 단원 도입부에 수록한 그림 자료는 학생들이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¹²³⁾ 즉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과 감정을 생생히 전달해주고자 각각의 그림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술 심리 치료를 받으며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직접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구술 증언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두 교과서 모두 해당 자료들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보존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자료는 문헌뿐 아니라

122) 「배를 따는 일본군」은 강덕경, 「끌려감」은 김순덕, 「태워지는 처녀들」은 강일출의 작품이다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14쪽).

123) 최상훈 외, 앞의 책, 167쪽.

구술과 그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판사	그림 자료
금성	
천재	

<그림 1> 3단원 도입부에 수록된 그림¹²⁴⁾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2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14쪽.

마지막으로 리베르는 본문에서도 강제 동원의 주체 및 동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 중 하나였는데, 본문 하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구술 증언 사례를 추가적으로 수록하여 역사적 사실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사례 3] 속 익명 2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피임 즉 감언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례이므로 본문에서 서술되었던 납치, 유괴, 취업사기, 인신매매 외의 방법으로도 강제 동원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리베르에 수록된 강제 동원 사례

리베르	강제 동원 사례
사례 1	[김의경 할머니] 1938년 봄인지 가을인지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두 명의 <u>일본 군인</u> 이 왔다. <u>거짓말</u> 로 ‘군인으로 나가자.’라고 하며 데리고 나왔다. ...

124) <그림 1>에 수록된 그림은 금성 3단원 소단원 제목 아래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 “한겨레” (2006)
사례 2	[김학순 할머니] 언니와 나는 따로 군인 들에게 끌려갔다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사례 3	[익명 1] 1943년 1월, 집을 보던 중에 건강한 남자 2명에게 강제로 끌려가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 [익명 2] 1944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담임 의 말에 따라갔으나 그 말은 꼭임 이었고,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다. ...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출전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21, 209쪽.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시기를 서술한 교과서는 리베르, 씨마스, 지학사, 천재가 있다. 해당 교과서들은 ‘만주사변’ 또는 ‘1930년대 초(반)’에 ‘위안소’가 설치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1930년대 초의 시기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나마 ‘위안소’의 기원을 언급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원초적 형태의 ‘위안소’는 1932년, 상해에 파견되었던 일본 해군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으며 육군 또한 이를 모방하여 육군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1932년에 설치된 육·해군 ‘위안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안소’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위안소’의 기원을 서술한다는 것은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점령지 내에 ‘위안소’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안소’의 설치·운영은 침략 전쟁의 발생을 계기로 단기간에 기획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3단원 본문 속 ‘위안소’ 설치시기

출판사	‘위안소’ 설치시기
리베르	만주 사변 당시부터 일본군은 전쟁터에서 위안소를 운영하였다.
씨마스	일제는 1930년대 초 부터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
지학사	일본군은 만주 사변 시기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
천재	일본군은 1930년대 초반 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였는데 ...

출전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21, 209쪽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218쪽 ;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지학사, 2020, 207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19쪽.

한편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었다. 9종의 교과서 모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아 갖은 수모와 고통 속에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단편적인 서술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운영 실태와 관련된 서술이 중요한 이유는 ‘위안소’ 내에서 ‘위안부’가 처해 있었던 강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였듯 ‘위안소’로 강제 동원되었던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성 착취를 당한 성노예였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놓여 있었으며 거주·외출·산책의 자유나 별도의 휴일이 제공되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위안부’는 제한되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 일본군에게 성교를 강요 당했으며 성교를 거부했을 때는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즉 강제 동원 및 성 착취라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위안소’ 내에서 ‘위안부’에게 가해졌던 강제적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여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여 ‘위안부’가 왜 성노예인지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별도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위안소’의 설치·운영 경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금성, 동아, 지학사, 해냄이 ‘위안소’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지학사를 제외한 3종의 교과서는 본문을 통해 ‘위안소’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위안소’ 내에서의 강제적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금성을 제외한 교과서가 동일한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동아, 지학사, 해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은 쑹산 ‘위안소’에서 구출된 만삭의 ‘위안부’, 고(故) 박영심이다.¹²⁵⁾ 해냄은 사진 자료 수록에만 그치지 않고 별도의 해설을 덧붙여 박영심의 증언으로 난징의 ‘위안소’가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는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이라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¹²⁶⁾ 해당 사진은 연합군에 의해 ‘위안소’에서 구

125) 씨마스와 천재도 동일한 사진을 수록하고 있지만, 본문이 아닌 탐구활동에 수록된 사진이므로 해당 절에서는 제외하였다.

126)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210쪽, (좌측 하단 사진과 해설 참조).

출되었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사진 자료는 “글과 달리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¹²⁷⁾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위안소’에서 구출되었던 피해 생존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위안소’ 내에서의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즉 해당 사진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위안부’들이 처해 있었던 강제적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성은 ‘위안소’ 분포 지도와 함께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자료로 수록하고 있는데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안소’ 분포 지도를 통해 침략 전쟁의 확대로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위안소’가 대량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속 내용을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최소 4차례 이상 ‘위안부’를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다. 즉 해당 자료들은 ‘위안소’ 설치 지역과 ‘위안소’ 운영 여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지시한 주체가 일본군이었음을 강조하고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	사진 자료
동아	
지학사	
해냄	

<그림 2> 3단원 본문에 수록된 사진 ①¹²⁸⁾

출전 :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동아출판, 2020, 196쪽 ;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지학사, 2020, 207쪽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2020, 210쪽.

127) 최상훈 외, 앞의 책, 166쪽.

128) <그림 2>에 수록된 사진은 지학사 3단원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출판사	사진 자료
<p>금성</p>	<p>[일본군 '위안소' 분포 지도와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이 쓴 일기장]</p>  <p>2018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 일기가 등장하였다. 과거에도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나, 원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기록자는 미얀마와 싱가포르에 거주했던 '위안소' 관리인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자료는 일제가 소각하였기에, 그동안은 일본군 '위안소' 할머니들의 증언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기에는 "연대 본부 사무실에 가서 위안부 수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위안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제4차 위안단' 등의 단어를 통해 적어도 일본이 4차례 이상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p>  <p>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이 쓴 일기장</p>

<그림 3> 3단원 본문에 수록된 사진 ②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4쪽.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서술 및 수록된 자료들의 내용은 일본군의 강제 동원으로 발생한 '위안부'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쟁점 및 시각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번째 쟁점 및 시각을 기준으로 본문 서술 및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리베르와 해냄을 통해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의 용기에 대한 간접적인 서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베르는 본문 하단에 구술 증언 사례를 수록하였는데 <표 6>의 사례 3 속 '사람들이 쑥덕거리, 남편이 죽을 때까지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당시 조선 사회가 '위안부' 피해자 즉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후유증뿐만 아니라 '정조를 잃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이기도 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또한 증언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여전히 익명이라는 점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내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리베르에 수록된 사회적 낙인 자료

리베르	사회적 낙인 자료
사례 3	[익명 2]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정신대에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쑥덕거리 객지로 나와 살았다. 33세에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에게 죽을 때까지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출전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21, 209쪽.

이 외의 교과서들은 본문 서술을 통해 전쟁이 끝난 ‘이후’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거나,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단편적인 서술만 하고 있다. 이는 서술의 맥락상 일본군에 의해 힘들고 불행했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조선 사회가 지니고 있던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힘들고 불행했던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마저도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사는 전쟁 이후의 삶보다 전쟁 중에 발생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표 7> 3단원 본문 속 사회적 낙인

출판사	사회적 낙인
금성	이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갔다.
동아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천재	전쟁 이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힘든 삶 을 살아야 했다.
해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군에 의해 버려지거나 희생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불행한 삶 을 살아야 하였다.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4쪽 ;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동아출판, 2020, 195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19쪽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210쪽.

해냄은 3단원 본문 서술 전 ‘주제열기’라는 소제목을 통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당시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힌 것일까요?’라는 질문과 별도의 설명을 덧붙

이고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망언이 이어지자 김학순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위안부’의 실체를 폭로하였다는 설명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 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인식하게 해줄만한 별도의 서술이나 자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즉 해당 질문은 공개 증언을 시도한 피해자의 ‘용기’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열기’ 이후 본문 말미에도 김학순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수많은 증언이 이어져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서술만 존재하고 있을 뿐, 김학순의 증언 이전, 피해자들이 침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았다.

<표 8> 해냄 본문에 수록된 피해자의 용기

출판사	자료 및 본문 서술
해냄	<p>[자료]</p> <p>주제열기</p> <p>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당시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힌 것일까요?</p> <p>중군 위안부 참상 알리겠다</p> <p>국내거주자중 첫 과거폭로 김학순씨</p> <p>17살 꽃다운 나이에 3개월에 달한 일본 군정대의 총독 자비로 무용 지명 김학순(67) 씨를 끌고 오승리(67) 씨를 만나고 14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잠시 발간을 완료하는 기사화면을 거른다.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위안부 생존자였으며 할머니 중 해당 비문 기사를 접한 후 자신의 증언을 폭로할 경우를 김학순씨가 예상하고 있다.</p> <p>○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한겨레", 1991. 8. 14.)</p> <p>1941년 김학순은 17세의 나이에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의 관료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는 망언을 하자 국내 거주자 중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폭로하였다. 그는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 대탈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하였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계로 퍼져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만들었다.</p> <p>[본문]</p> <p>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군에 의해 버려지거나 희생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였다. 그러나 김학순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수많은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의 증언으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p>

출전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210쪽.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3단원은 ‘일제의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이라는 성취기준 아래 일제와 조선이라는 가해와 피해의 구조 속에서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 본문 속 ‘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위안부’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강제 동원 주체, 강제 동원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한편 ‘위안소’ 설치·운영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 서술이나 자료는 없었지만, ‘위안소’에서 구출되었던 ‘위안부’들의 모습을 사진 자료로 수록해 ‘위안소’ 내에서 ‘위안부’들이 처해 있었던 강제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수록된 그림과 사진 자료 모두 당시 일본군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강제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3단원은 민족주의 시각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위안소’ 제도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공창 제도나 사회적 낙인, 피해자의 용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3단원에서는 두 번째 쟁점과 시각이 부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4단원은 ‘위안부’가 교육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원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및 해결의 측면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4단원을 통해 3단원에서 부재된 시각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였듯 4단원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및 해결의 측면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등장한 피해자, 김학순의 용기와 용기의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김학순의 공개 증언에 대한 내용이다.

씨마스, 천재, 해냄¹²⁹⁾은 본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김학순의 존재를 서술하고 있으며 김학순의 공개 증언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3종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김학순의 공개 증언은 김학순이라는 피해자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주체’로서 갖게 된 의의를 강조하며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연대하게 된 계기를 부각시키고 있는

129) 해냄의 경우, 3단원 본문의 도입부 ‘주체열기’를 통해 김학순의 공개 증언을 서술하고 있다. 즉 4단원 본문에 구성된 서술은 아니지만,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라는 범주 내에서 포함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문 서술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씨마스는 김학순의 공개 증언 당시 사진 자료와 증언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표 9> 4단원 본문 속 김학순의 공개 증언

출판사	내용
씨마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 증언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 강제 동원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본과 한국의 시민 사회에서부터 나타났다. 국제 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일자, 일본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사람과 물자를 동원한 점을 사과하였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공식 사과와 문서 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천재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공개 증언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냄	김학순은 … 1991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의 관료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는 망언을 하자 국내 거주자 중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폭로하였다.

출전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322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311쪽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210쪽.


출판사	자료
씨마스	 <p>▲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증언하는 고 김학순 할머니(1991)</p> <p>자료 읽기 고 김학순 할머니의 기록 증언</p> <p>“제가 자랑스러운 것 하나 없는 과거사를 들추고 나선 게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였겠습니까? …… 대충 마무리 지을 만한테 뭘 자꾸 버티느냐는 식의 일본 쪽 시각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 아닙니다.” —『경향신문』(2013. 6. 12.)</p>

<그림 4> 씨마스에 수록된 김학순의 공개 증언

출전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322쪽.

김학순의 공개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를 향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 또한 거세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관방 장관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리베르, 비상, 천재 교과서는 본문에서 고노담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당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는 간략한 서술만 하고 있다. 하지만 고노담화는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전부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하던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이에 리베르는 본문 하단의 자료를 통해 고노담화 당시의 담화문을 수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표 10> 고노담화 관련 본문 서술 및 자료¹³⁰⁾

출판사	본문 서술 및 자료
리베르	<p>[본문]</p> <p>1993년의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p> <p>[자료]</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한눈에 보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p> <p>……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강압, 강압 등에 의해 모집된 사례가 많다. 더욱이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일본군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관방 장관 담화(1993)</p> </div>  <p>↑ 고노 담화 고노 관방 장관이 위안소 운영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지만 보상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p> <p>▶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조사에 착수하였고,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은 일본이 위안소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사실을 부정하고, 발언 자체를 취소하려는 발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p>
비상	<p>[본문]</p> <p>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p>

130) 씨마스의 경우, 고노담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교과용 교과서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표 10>에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았다.

천재	[본문]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	---

출전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21, 303쪽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비상교육, 2020, 308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311쪽.

금성, 천재, 해냄은 본문과 자료를 통해 수요시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수요시위는 피해자의 용기에서 비롯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는 결과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성은 중단원의 ‘교실열기’를 통해 수요시위 현장 사진을 수록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 중 발생한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자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바라는 진정한 사과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답이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임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천재는 본문보다는 날개의 보충 설명을 통해 수요시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가 <표 11>의 수요시위 1000회를 맞아 세워진 평화비에 대한 내용과 사진이다. 해냄은 ‘주제열기’라는 소단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수요시위 현장 사진과 함께 ‘위안부’의 존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1992년부터 수요시위가 열리게 되었다는 별도의 설명을 덧붙여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고 있다.

<표 11>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지만 금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천재와 해냄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의 사진을 자료로 수록하고 있다. 평화비는 전쟁으로 비롯된 ‘위안부’ 문제, 즉 전시 성폭력으로 발생한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비의 의미를 강조하여 서술해 주거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1> 수요시위 관련 수록 자료

출판사	수요시위 및 평화비 관련 자료	
금성	<p style="text-align: center;">필리핀</p>  <p style="text-align: center;">▲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미국 샌프란시스코)</p>	<p>전쟁 피해자 배상 문제</p> <p>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징용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각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 이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강제 징용자들의 손해 배상,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p>
천재	 <p style="text-align: center;">▲ 수요집회와 평화의 소녀상</p>	<p>1992년 시작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수요 집회)'는 단일 주제로는 세계 최장 기간 지속되고 있는 집회이다. 이 집회는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시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아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p>
해냄		<p>일제 강점기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정부가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p>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309쪽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311쪽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310쪽.

수요시위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결과물은 2000년 법정이다. 씨마스, 미래엔, 천재, 해냄은 본문과 자료를 통해 2000년 법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씨마스는 본문을 통해 일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진실과 화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00년 법정과 평화비 설치가 확대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본문의 날개를 통해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했던 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맥두걸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 보고서이다. 따라서 맥두걸 보고서는 유엔 인권위원회 즉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으로 발생한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출판사	자료
씨마스	* 맥두걸 보고서: 1998년 맥두걸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전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며, 위안소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일본 정부와 관리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림 5> 씨마스 4단원 수록 자료

출전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323쪽.

미래엔은 본문을 통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하단에 ‘역사 속 이야기’라는 자료를 수록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활동 중 하나로 2000년 법정이 개최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해당 서술은 피해자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국경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출판사	자료
미래엔	<p>역사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p> <p>◆이들에게 저질러진 범죄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저질러진 범죄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범죄로 남아 있다.◆</p> <p>200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은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p> <p>'일본군 성 노예 제도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은 한국·중국 등 피해국과 일본의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미국·영국·아르헨티나·네덜란드 등 각국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였다. 법정에는 3백 명이 넘는 기자와 천 명 이상의 방청객이 참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최종 판결에서는 일왕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에 유죄를 선고하였다.</p> <p>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앙심 있는 세계 각국의 시민은 국경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정의 구현을 위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p> <p>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http://www.womenandwar.net</p>  <p>◎ 여성 국제 전범 법정(2000)</p>

<그림 6> 미래엔 4단원 수록 자료

출전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20, 305쪽.

천재는 2000년 법정의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미국 하원과 유럽 연합 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해법은 2000년 법정인 민간 법정이라 법적으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침략 전쟁 당시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군 관련 책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서술하고 있다.

즉 본문 속 2000년 법정에 대한 서술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활동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및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2000년 법정의 성격과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을 덧붙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동아는 4단원 본문을 통해 '위안부'와 관련된 별도의 서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특집'이라는 자료 공간을 구성해 '위안부'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동아는 씨마스의 맥두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자료로 수록하고 있는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위안부'를 전시 성폭력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당 쪽에서

는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성노예라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김학순의 공개 증언과 관련해서는 증언 당시의 사진과 증언을 기록한 신문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김학순의 증언을 증명해주듯 우측에는 일본의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발견한 공문서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해당 공문서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일본군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는 고노 관방 장관과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교하며 변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다음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요시위, 2000년 법정, 미국 연방 의회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연표가 수록되어 있다. 수요시위, 2000년 법정, 미국 연방 의회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 공식사죄, 배상을 촉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촉구하는 이유는 지금도 분쟁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단죄하려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적 때문이다.

동아의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제로 바라보며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고(故) 이옥선, 김복동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복동의 나비기금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해당 서술은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복동이 피해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처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고 연대해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출판사	자료
<p>동아</p>	<p>‘역사특집’, 298쪽</p> <p>일본군 ‘위안부’란?</p> <p>일본군 ‘위안부’란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말한다. 일본군 위안소는 1932년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하이에 처음 설치된 이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운영되었다.</p> <p>특별 보고관은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 매춘과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따라서 특별 보고관은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p> <p>- ‘유엔 여성 폭력 문제 특별 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p> <p>국제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를 ‘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고 위안소를 제도화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보여 주고, 범죄 주체로서 일본군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현하고 있다.</p> <p>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세 나라의 소녀들과 김학순 할머니 동상이 함께 세워져 있다.</p>  <p>④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미국 샌프란시스코)</p> <p>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증인과 일본 정부의 입장</p> <p>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최초 증언</p> <p>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대’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증언하게 됐다. …… 처음엔 일본군을 피해 도망가면 기어코 쫓아와 울면서 당하곤 했어요. 그때 내 나이 열일곱이었지요. - “경향신문”, 1991. 8. 15. -</p>  <p>④ 김학순 할머니</p> <p>일본군 ‘위안부’ 운영과 일본군</p> <p>일본 주오대학교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굴해 공개하였다.</p>  <p>④ 일본군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한 자료가 발굴되었다는 보도(1992. 1. 11.)</p> <p>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p> <p>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일본군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p> <p>- ‘고노 내각 국방 장관 담화’(1993. 8. 4.) -</p> <p>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p> <p>- 아베 총리, ‘참의원 예산 위원회 발원’(2007. 3. 16.) -</p> <p>일본이 국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p> <p>- 아베 총리, ‘참의원 예산 위원회 발원’(2014. 10. 3.) -</p>

‘역사특집’, 299쪽

역사특집

일본군 ‘위안부’-성폭력 피해자에서 세계 인권 운동의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섰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인류 보편의 인권 보장과 전성 성폭력 방지에 앞장서는 인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작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평화비
(소녀상, 서울 종로)

1992년 수요 시위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8일 서울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14일에는 1,000번째 수요 시위를 맞이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소녀상)를 세우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배상을 촉구하였다.

2001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 법정

-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연적으로 인정할 것
- 위반 행위와 앞으로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성의 평등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것 - ‘최종 판결문’(일본, 2001. 12. 4.) -

2007년 미국 연방 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2007. 7. 30.)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아·태 지역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인권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내 이야기는 꼭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제작,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



이육선 할머니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게 아니더라고. 외국에서도 당한 여자들이 많아. 돌봐 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기금을 한번 모아 보자고 했어. 이름은 ‘나비’로 짓자고 했지.

- ‘아시아경제신문’, 2014. 8. 22. -

김복동 할머니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서 받게 될 법적 배상금 전액을 전성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돕는 데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나비 기금이 조성되었다.

<그림 7> 동아 ‘역사특집’ 자료

출전 :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동아출판, 2020, 298~299쪽.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4단원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연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연대의 결과물로는 수요시위, 2000년 범정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교과서는 고노담화, 쿠마라스와미·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4단원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인식과 목적 즉 전시 성폭력으로 발생한 여성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본문 서술 및 자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요컨대 3단원에서는 일제와 조선의 가해와 피해의 구조 속에서 ‘위안부’ 문제가 서술되는 민족주의 시각이 강조되었고, 4단원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평화의 시각이 강조되었다.

즉 3단원과 4단원의 본문 서술 및 자료는 각각 민족주의와 인권·평화의 시각의 측면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두 단원 모두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억압당했던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절. 탐구활동

3단원의 본문 서술 및 자료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첫 번째 쟁점과 시각을 중점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요소와 시각 또한 이와 동일하였다. 반면 4단원은 교육과정을 통해 ‘위안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3단원에서의 시각을 확장시키고자 본문 서술 및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 갈등 및 해결의 측면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3단원과 4단원 모두 두 번째 쟁점과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성주의, 그 중에서도 ‘위안소’ 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공창 제도 즉 성매매 제도와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별도의 본문 서술 및 자료는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 그나마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자료가 일부 존재하긴 하였으나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인 편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므로 ‘위안부’와 관련된 총체적 시각을 본문의 지면을 이용해 확장시켜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이에 본문 속 시각의 부재를 보충할 수 있는 공간이 교과서 단원 마무리에 구성되어 있는 탐구활동이라고 보고, 탐구활동의 구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는 본문의 시각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3단원과 4단원을 통해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3단원, 4단원 탐구활동 구성 및 유형

출판사	3단원 탐구활동	4단원 탐구활동
금성	항의 서한 작성	토의
동아	X	X
리베르	X	X
미래엔	손 팻말 문구 작성	X
비상	UCC 제작	X
씨마스	편지 글쓰기	X
지학사	편지 쓰기	X
천재	편지 글쓰기	X
해냄	프로젝트 학습	X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듯 3단원과 4단원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탐구활동을 모두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뿐이며, 대부분의 교과서가 4단원보

다는 3단원에서 탐구활동을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성, 씨마스, 지학사, 천재의 3단원 탐구활동 유형은 항의 서한, 편지 글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표 1>의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을 주제로, 일본 정부에 보내는 편지 글쓰기라는 평가 방법을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4단원에 ‘위안부’와 관련된 별도의 탐구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4단원의 평가 방법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단원 본문 서술 및 자료의 시각을 탐구활동에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로는 비상, 씨마스, 천재가 있다. 비상은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이라는 주제 아래 징용·징병,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며, UCC 제작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 방법에서 제시한 편지 글쓰기 활동은 아니었지만, 평가 방법의 주제는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상 탐구활동의 첫 번째 질문은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사용 교과서의 예시 답안은 “일제에 의해 비인간적 대우와 모진 고통을 겪었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존재”¹³¹⁾ 하였음을 답하고 있다.

앞서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교사용 교과서의 예시 답안을 통해 해당 활동은 일본의 가해 행위에 대한 민족의 피해, 즉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고, 민족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CC 제작도 징용·징병,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 앞서 제시된 관련 자료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드러내는 내용이므로 현재까지도 한·일 역사 갈등 및 외교적 갈등이 되고 있는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 도면희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비상교육, 2020, 215쪽.

출판사	탐구활동
비상	<div data-bbox="344 272 485 295"> <p>2 일본군 '위안부'</p> </div> <div data-bbox="344 301 742 475"> </div> <div data-bbox="779 301 1133 484"> <p>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였고, 중일 전쟁 이후 전선이 확대되면서 군 위안소의 수를 계속 늘려 나갔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에는 일본군 육군 차관이 날인·결재하였고, 육군 대신 결재란에는 '위임'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국과 타이완을 비롯한 각국의 여성들이 위임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다.</p> </div> <div data-bbox="344 513 550 537"> <p>3 남아있는 민간 배상 문제</p> </div> <div data-bbox="344 542 897 683"> <p>일제 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협정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편, 2018년 한국 대법원은 한일 협정의 내용을 개인 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소송은 1991년에 시작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 집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p> </div> <div data-bbox="916 513 1170 697"> <p>수요 집회와 평화의 소녀상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하여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어린 소녀 모습의 조각상을 세웠다.</p> </div> <div data-bbox="344 716 522 739"> <p>손수 제작물(UCC) 만들기</p> </div> <div data-bbox="344 759 971 83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 1, 2를 보고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해 보자. 2 징용, 징병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손수 제작물(UCC)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div> <div data-bbox="1002 726 1094 759"> <p>사실 이해 정보 활용</p> </div>

<그림 8> 비상 3단원 탐구활동

출전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비상교육, 2020, 215쪽.

씨마스는 ‘식민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일본 정부에게 편지 글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씨마스는 비상과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의 주제와 활동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에 수록된 자료는 강제 동원되었던 노동자, 군인, ‘위안부’ 피해자의 사례인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자료로는 3단원 본문과 자료에서 자주 수록되었던 고(故) 박영심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과 함께 언급된 추가 설명은 피해자가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과정 및 ‘위안소’ 내에서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교사용 교과서 속 학습 주안점을 확인해보면 학생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사례를 파악한 후, 어떠한 희생을 당했는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²⁾ 특히 사과와 배상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활동 또한 한일 양국의 역사 갈등이라는 대립 구조 속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과 민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해결하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132) 신주백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220쪽.

있다.


출판사	탐구 활동
<p>씨마스</p>	<div style="text-align: right;">사례 ①</div>  <p>▲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p> <p>가 상 편 지 예 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1939년 봄, 당시 17세의 박영심은 친구와 함께 집에 가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다. 박영심은 평양역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중국 난징으로 끌려갔다. 그곳에 있는 군 위안소에서 매일 지옥 같은 성 노예 생활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후 상하이, 비마를 거쳐 윈난성에서 성 노예 생활을 하던 중 여성들과 함께 도망쳐 1946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93년 자신의 일본군 성 노예로서의 생활을 증언하였고, 2006년 향년 85세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다.</p> </div> <div style="margin-top: 20px;"> <p>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아직 이분들께 배상응커녕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전심을 담아 사과하였습니다. 이런 진정 어린 사과는 물질적인 배상보다 아픔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피해자분들께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용감한 단 한 명의 일본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〇〇.〇〇.〇〇. 〇〇고등학교 1학년, 〇〇모듬울림</p> </div>

<그림 9> 씨마스 3단원 탐구활동

출전 :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씨마스, 2020, 220~221쪽.

천재는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편지 글쓰기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천재 또한 씨마스처럼 평가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공간 하단에 배치된 ‘스스로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편지글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의 의도가 편지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사용 교과서에 기재된 활동의 목적이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과 ‘일제의 만행’을 추체험해 보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해당 활동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¹³³⁾ 그러므로 해당 활동 또한 이 전의 비상, 씨마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의 가해와 피해 구조를 형성하여 식민지 조선인의 피해와 피해 회복 및 해결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	탐구 활동
천재	<p>수행 평가 17, 창의 활동 일본 정부에 편지 쓰기</p> <p> 본문과 222~223쪽 ‘끌려간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라고 가정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편지글을 써 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제목: 죽기 전에 사과와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p> <p>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고 얼마 뒤 열일곱 살이었던 나는 일본의 제철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적금을 들어 준다는 약속만 믿고 3년간이나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없고 전쟁으로 공장이 무너졌는데 무슨 돈이나는 말만 듣고 쫓겨나듯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아흔일곱 살. 먼저 간 친구들처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도 다쳐 평생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정의와 양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위자료를 배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p> <p>역사 다큐 03, 끌려간 사람들</p>

133) 최병택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21쪽.



<그림 10> 천재 3단원 탐구활동

출전 :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천재교육, 2020, 221-223쪽.

반면 3단원 본문 서술 및 자료의 시각을 탐구활동에서 확장시키고 있는 교과서로는 금성, 미래엔, 지학사, 해냄이 있다. 이 중 금성은 3단원 뿐 아니라 4단원을 통해서도 ‘위안부’와 관련된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일 마지막에 살펴보려 한다. 미래엔은 탐구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왜 기억해야만 할까?’라는 주제로 수요시위 참석을 위한 손 팻말 문구 작성하기 활

동과 ‘위안부’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에 수록된 자료는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증언 사례에는 본문 서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강제 동원의 주체인 일본군사와 교장, 강제 압송 등 강제 동원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즉 탐구활동에 수록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시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미래엔 탐구활동의 목표인 것이다. 이에 교사용 교과서는 첫 번째 질문의 학습 주안점을 통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공식사죄와 배상이므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¹³⁴⁾ 교사용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란 침략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즉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여 성 노예화 시킨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는 것이므로 첫 번째 활동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의 진실 즉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였던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질문은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에 교사용 교과서의 예시 답안은 ‘전시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 성폭력 및 인권 유린의 범죄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형인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34) 한철호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20, 213쪽.

출판사	탐구활동
미래엔	<div data-bbox="367 305 618 465">  <p>● 수요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p> </div> <div data-bbox="367 517 618 639"> <p>➔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제가 상하이 사변 (1932) 직후 상하이 파견군을 위해 군 위안소를 설치 하면서 비롯되었다. 국제적으로 영어 표현인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일본군 성 노예)'으로 불린다.</p> </div> <div data-bbox="367 691 779 846"> <p>검은 재킷에 별을 두 개 달고 긴 칼을 찬 일본 순사 놀이 나와 친구를 강제로 평양까지 압송했다. 평양역에 도착하니 이미 15명의 조선 여성이 끌려와 있었다. 기차와 자동차를 타고 끌려간 곳은 중국 남경이었다. 일본군은 하루 30명 정도 왔다. 저항을 하면 다락방에 끌려가 매를 맞아야 했다.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었지만 감시는 엄혹했다. - 서울대 인권 센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이야기' -</p> </div> <div data-bbox="367 865 408 890"> <p>활동</p> </div> <div data-bbox="367 900 1030 94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요 시위에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손 팻말에 쓸 문구를 작성해 보자. 2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를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div> <div data-bbox="655 305 1153 407"> <p>매주 수요일 12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다.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 시위에는 학생,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종종 참여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30년 가까이 시위가 이어져 온 까닭은 무엇일까?</p> </div> <div data-bbox="655 417 1153 571"> <p>일본군 '위안부'(성 노예제)는 과거 일제가 침략 전쟁을 벌이며 저지른 추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이는 오랜 세월 여성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억압과 폭력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태이다. 이러한 범죄가 일본의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강제적으로 자행되었다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생존자의 공개 증언을 계기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p> </div> <div data-bbox="655 581 1153 678"> <p>이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를 외면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이 화해와 용서는 불가능하며,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인류 사회도 실현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957 710 1153 736"> <p>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의 증언</p> </div> <div data-bbox="779 745 1153 871"> <p>12세가 되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장이 나를 정신대에 보냈다. 아오모리현에서 위안부로 있다가 귀국하였다. 큰언니는 나의 과거가 창피하다고 말도 못하게 한다. 내 과거가 알려지면 조카들이 시집도 못 간다고 조롱이 자라라고만 한다. - 정신대 연구회 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p> </div>

<그림 11> 미래엔 3단원 탐구활동

출전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20, 213쪽.

지학사는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사례와 함께 세 가지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지어 정리해보는 것으로 교사용 교과서 속 예시 답안은 "일본군 '위안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매매 및 유괴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고, '위안소'에서 죽음보다 심한 성노예로 끔찍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135)라고 답하고 있다. 즉 '위안소' 내의 강제적 상황 속에서 '위안부'의 인권이 유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활동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입장 차이를 발표해보는 것으로 예시 답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일본 정부 측은 2015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한국 '위안부' 피해자 측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가 배

135) 송호정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지학사, 2020, 212쪽.

제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렇듯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측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배제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쟁점이 과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이후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활동은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토론했고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에 편지 글쓰기 활동은 이전의 씨마스, 지학사와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의 주제와 활동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활동에 대한 예시 답안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전 활동들에 대한 예시 답안을 통해 지학사의 탐구활동이 지닌 내용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활동의 예시 답안은 ‘위안부’는 일본군의 침략 전쟁 당시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유린의 범죄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활동의 예시 답안은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식민지 조선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해결하려는 내용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출판사	탐구활동	
<p>지학사</p>	<p>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p> <p>며칠 후 손님방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러니 남자들이 비글비글 끓는 그 무서운 데를 어찌 들어가겠는가?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그러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남자를 받지 않는 여자들을 세워 놓고 악대기로 때렸다. 죽을 만큼 두들겨 맞으면 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때 겪은 것은 말로 다할 수도 없다. - 김분선 할머니의 증언, 2013</p> <p>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이에 대한 논란</p> <p>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위로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법적 책임과 배상금이 아닌 도의적 책임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p>  <p>↑ 평화의 소녀상(서울 종로)</p> <p>1. 증언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의 피해 내용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자.</p> <p>2.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 차이를 발표해 보자.</p> <p>3.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토론했고 보고,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 보자.</p>	<p>강제 징용 피해자의 증언</p> <p>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랐다. 혼련소에서 2주간 정신 혼련, 군사 훈련 등을 받은 후 야하타 제철소에 배치되었다. 열차의 선로 전환과 관리를 담당하였고, 외출과 개인행동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나 도망치다가 붙잡혀 수일간 고문당하였다. 회사로부터 월급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 - 김규수 할아버지의 증언, 2007. 6.</p> <p>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p> <p>대법원은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합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합정문 조항에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한 문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 2018. 10. 30.</p>  <p>↑ 강제 징용 노동자상(서울 용산)</p> <p>↓ 결론이 ↓</p> <p>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ttp://www.hermuseum.go.kr)을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본다.</p>

〈그림 12〉 지학사 3단원 탐구활동

출전 :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지학사, 2020, 212쪽.

해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하기’라는 주제 아래 여섯 가지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¹³⁶⁾ 해당 활동은 교사용 교과서를 통해 여섯 가지의 구성마다 활동 팁(Tip)¹³⁷⁾을 두고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구성인 ‘문제 명료화하기’의 활동 팁은 ‘위안부’ 문제를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이 과거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현재에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권·평화의 시각이라는 주안점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를 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거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위안부’에게 가해졌던 전시 성폭력이라는 범죄 행위가 인권 유린의 문제로 주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 사회는 여성을 향한 성 차별적 관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여성의 정조가 상실된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인식이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문제이자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의 ‘위안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주제어는 한·일 정부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협정과 합의이다. 해당 협정과 합의는 모두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교사용 교과서의 활동 팁에서 강조하였던 시각이 인권·평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피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체결한 협정과 합의에는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136) 여섯 가지 중 두 번째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은 각각 독후감, 영화 감상문 작성하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활동하기, 프로젝트 학습 결과 발표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2020, 226~227쪽).

137) 박중현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2020, 226쪽.

출판사	탐구 활동
해냄	<p>2 문제 명료화하기</p> <p>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p> <p>모둠 활동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점 정리하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① 과거 관점에서의 문제점 주요 주제어 전쟁 중 폭력, 여성 인권</p> <p>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걸림돌 주요 주제어 한일 협정, 청구권, 12·28 '위안부' 합의</p> </div>

<그림 13> 해냄 3단원 탐구 활동

출전 :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해냄에듀, 2020, 226쪽.

금성은 유일하게 3단원과 4단원을 통해 '위안부'와 관련된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였다. 먼저 3단원의 탐구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 사회 내에서 최초로 공개 증언한 고(故) 김학순의 증언과 네덜란드계 호주인 '위안부'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의 증언 사례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위안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질문과 함께 제시하며 일본 정부에게 '평화'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항의 서한을 작성해보자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교사용 교과서 속 예시 답안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여성의 '정조'를 중시 하던 '남성 중심 사회' 때문이었다고 답하고 있다.¹³⁸⁾ 이는 '위안부' 피해자 즉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던 조선 사회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질문과 함께 제시되었던 증언 사례가 조선인뿐 아니라 네덜란드계 호주인 피해자의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조선인만 존재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사례를 통해 일본군은 국적과 민족을 구별

138) 최준채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5쪽.

하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전달해주고 있다.

마지막, 항의 서한 작성하기 활동은 일본 정부에게 편지 글쓰기라는 평가 방법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평화’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것을 작성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의 주제는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항의 서한 작성하기 활동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집단적·조직적 성범죄, 인권 유린 및 평화를 파괴한 전쟁범죄의 문제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금성 3단원의 탐구 활동은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와 함께 평화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	탐구 활동	
금성	<p>지문 1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한 김학순 할머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광복 46년 만에 처음으로 일제의 잔학성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학순 할머니는 …… 1940년경 최전방이었던 중국 중부의 철벽진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2-3개월을 치욕 속에 보냈다. …… 그는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발뻠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17-22세에 이르는 한국인 여성 5명은 천으로 칸막이를 친 방에서 하루 3-4명의 일본군을 상대했으며 부대에서 갖다주는 식량으로 연명하고 옷은 군복이든 중국인 옷이든 가리지 않고 입었다고 김학순 할머니는 증언하였다. …… “일본군을 피해 도망가면 기어코 쫓아와 울면서 당하곤 했어요. 그때 내 나이 열일곱이었지요” -『경향신문』 1991. 8. 15.</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p>일본군 '위안부' 피해 보상 시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김학순 할머니</p> </div> </div>	<p>지문 2 네덜란드계 호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p>일제의 만행을 고백하는 안루프 오헤른 할머니</p> </div> <div style="width: 45%;"> <p>저는 현재 인도네시아로 불리는 옛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 태평양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1942년에 일본군이 자와섬으로 쳐들어오면서 그 아픔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 1944년 3월, 일본군은 17세 이상의 젊은 여자들에게 수용소 건물 앞에 서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 우리는 덮개가 없는 트랙에 강제로 태워져 소 때처럼 처박혔죠. …… 트럭이 커다란 네덜란드 식민지 건물 앞에 멈추자 일본군이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 우리는 일본식 꽃 이름이 들어간 각자의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위안소 문마다 그 이름들이 권으로 박혀 있었습니니다. 나는 키가 작고 뚱뚱한 대머리 장교가 사무라이 칼로 위협하는 가운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동아』 2007. 5. 25.</p> </div> </div>
<p>1 지문 1, 2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는 데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자. ☞</p>		<p>2 '평화', '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써 보자. ☞</p>

<그림 14> 금성 3단원 탐구 활동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225쪽.

4단원의 탐구 활동은 일본의 고노 관방 장관과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고(故) 김복동의 발언을 자료로 제시하며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

다. 이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4단원의 성취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고노 관방 장관과 김복동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교사용 교과서의 예시 답안은 역사 왜곡 및 갈등 유발을 통해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세력을 경계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담긴 역사교육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¹³⁹⁾

즉 금성 4단원의 탐구활동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범죄의 재발 즉 전시성폭력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류가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	탐구 활동
<p>금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일본군 '위안부'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집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건의 기록을 봐도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㉓ 일본에 한류 열풍이 불고, 월드컵도 공동 개최하고 일본 국립 미술관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했는데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p> <p>- 『조선일보』, 2015. 6. 9.</p> </div> <div style="width: 45%;"> <p>나는 우리 나이로 15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93살 먹도록 기다려도 어떤 사죄도,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쟁 바라는 것은 전신 어린 사회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싸워온 것은 밥을 못 먹고 생활이 고달파서가 아닙니다. 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p> <p>- 『한겨레』, 2019. 1. 29.</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고노 요헤이 전 장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김복동 할머니</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p>위 자료는 2015년 6월 도쿄의 일본 기자 클럽에서 고노 요헤이 전 장관이 발언한 내용과 2018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진행된 김복동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고노 전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를 인정했던 '고노 담화'(1993)의 주인공이고,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세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활동한 인권 운동가이다. 발언한 장소와 시기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과거사를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45%;"> <p>1 ㉓에서 고노 전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p> <p>2 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보자. ☞</p> </div> <div style="width: 45%;"> <p>3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토의해 보자. ☞</p> </div> </div>

<그림 15> 금성 4단원 탐구활동

출전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311쪽.

요컨대 교과서 속 본문 서술 및 자료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실히 따라야 하므로 ‘위안부’를 둘러싼 총체적 시각을 모두 담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이 탐구활동

139) 최준채 외, 교사용 고등학교 한국사, (주) 금성출판사, 2020, 309쪽.

동이라고 보아 탐구활동의 구성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시각을 분석해 보았다. 교과서별로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있었는데 ‘위안부’와 관련된 탐구활동은 주로 3단원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위안부’가 학습요소로 직접 제시되고 있던 교육과정을 반영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3단원 본문 서술 및 자료의 시각을 탐구활동에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로는 비상, 씨마스, 천재가 있었다. 해당 교과서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가 드러나는 사례를 배치함으로써 일본 정부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해결하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3단원 본문 및 자료의 내용과 시각을 확장시키려 노력한 탐구활동으로는 금성, 미래엔, 지학사, 해냄이 있었다.

해당 교과서들은 3단원의 본문 서술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멈추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이자 성노예 문제였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오늘 날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3단원 본문 서술 및 자료가 가지고 있던 시각과 비교해보았을 때 확장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탐구활동을 통해 본문 서술 및 자료가 지닌 시각을 확장시키려 노력한 교과서들 중에서도 금성 3단원의 탐구활동이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금성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 사회와 여성 차별적 성 관념으로부터 비롯된 정조 관념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침묵하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위안부’ 피해자 즉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시에 ‘위안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근간으로 공창 제도 즉 성매매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교과서 본문 서술 및 자료, 탐구활동에서 유독 성과 관련된 내용이 구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성을 부끄러워하고 하고 숨기려 하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태도와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비롯된 여성 차별적 성 관념과 인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 맺음말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강제 동원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남성 중심 사회 속 일본군 ‘위안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쟁점은 민족주의와 여성주의 시각을 중점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각각의 형태로 발전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쟁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위안부’에 대한 본문 서술 및 자료, 탐구활동의 구성이 지닌 시각을 분석해 보았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따르면 3단원은 일제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했던 민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반면 4단원은 교육과정에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즉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의 결과물들이 중점적으로 언급되며 인권·평화의 시각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단원의 본문 서술 및 자료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와 학계의 쟁점 및 시각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4단원의 본문 서술 및 자료는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및 성노예 문제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 연대의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3단원 본문에서 부재된 시각을 보충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각 중에서도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억압당했던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각은 여전히 공통적으로 부재되고 있었다.

특히 ‘위안소’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공창 제도 즉 성매매 제도에 대해서는 9종의 교과서가 어떠한 형태로든 서술하고 있지 않았다. 그나마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만연했던 여성 차별적 성 관념과 인식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자료가 일부 존재하긴 하였으나, 이 또한 극히 제한적인 편에 속했다. 이는 본문보다 자유롭게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탐구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하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초등학생의 충격 및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는 명분으로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제외하였던 사건을 들 수 있다.¹⁴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의 언급을 봉쇄해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했던 여성 차별적 성 관념 및 인식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의 삶을 언급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사회 내부가 가진 문제에 대해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를 서술할 때 여성주의 시각을 배제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교과서 지면상의 문제와 제한된 수업시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문과 자료를 통해 총체적인 시각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탐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문의 시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3단원의 본문은 민족주의 시각이, 4단원의 본문은 인권·평화의 시각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탐구활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뿐이었는데, 이 또한 인권·평화에 대한 시각이 중점적으로 구성되고 있어 사회적 낙인이라는 여성주의 시각의 일부분만 보여주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탐구활동을 통해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부재되고 있는 시각의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민족, 여성, 인권·평화 등의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구활동의 구성이 본문 외의 시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나 윤리 과목 등 타 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시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타 과목이 아니더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¹⁴¹⁾ 등을 활용해 ‘위안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성, 인권·평화의 시각을 접목시킨 연계교육을 실천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업이나 학생 자치운영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위안부’ 문제가 지닌 다양한 시각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¹⁴²⁾ 특히 현장 학습을 통한 실천적 수업 활

140) 문순창, 「일본군 ‘위안부’ 수업 실천의 성찰적 진화」, 『역사와 교육』 제20호, 역사교육연구소, 2021, 95쪽.

141) 문순창, 위의 논문, 100쪽.

142) 문순창, 위의 논문, 100쪽.

동은 학생들이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직접 만나고 역사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실천적 수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장소로는 수요시위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수요시위 현장은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역사교육의 현장”¹⁴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장소이자 학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고는 학계의 주요 쟁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교과서 본문 서술 및 자료, 탐구활동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부재되고 있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부재된 시각을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나 수업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14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135쪽.

참고문헌

1. 교육과정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 2015.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4]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의 일부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평가원, 「역사과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8.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5.

2. 교과서

-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동아출판, 2020.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비상교육, 2020.
 박중현 외,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2020.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지학사, 2020.
 신주백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씨마스, 2020.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리베르스쿨, 2021.
 최병택 외, 고등학교 한국사, ㈜ 천재교육, 2020.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출판사, 2020.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 미래엔, 2020.

3. 단행본

- 김부자 외,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민속원, 2018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번역 공동체 잇다 옮김),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
 박정애,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야마시타 영애 (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 2012.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 옮김), 『종군위안부·자료집』, 서문당, 1993.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옮김),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1998.
 요시미 요시아키 (남상구 옮김),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13.
 윤명숙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2007.

캐롤라인 노마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열다북스, 20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아카데미, 2014.

현대송(玄大松) 편,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2008.

4. 연구 논문

김도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ICC규정 이행법률에 따른 검토」, 『JEONBUK LAW JOURNAL』 제5권 제1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2015.

김영석,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강정숙,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26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문순창, 「일본군 ‘위안부’ 수업 실천의 성찰적 진화」, 『역사와 교육』 제20호, 역사교육연구소, 2021.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 6월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경훈, 「역사 부정의 파고 속,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역사와 교육』 제20호, 역사교육연구소, 2021.

5. 학위 논문

김선수,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전쟁사 서술 비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권지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분석과 교육 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서경수,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과 역사교과서 서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서민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 강제연행 서술의 현황과 내용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신지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제의 강제 동원’과 ‘동아시아 갈등 해결’에 관한 내용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이아현, 「역사교육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임채원, 「2007 개정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체제와 내용」,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최서연,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여성관련 내용 분석 및 특징」,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6. 인터넷(웹페이지 및 기사) 자료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https://www.ktbook.com/>.

이은진, 「‘위안부’ 문제는 무슨 죄목으로 어디에 소장을 내야할까?」, 『일다』, 2021년 5월 9일, <https://m.ildaro.com/a.html?uid=9035&sc=sc1>, (2021년 11월 3일 검색).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https://www.archive814.or.kr/>.

정성조, 수요시위 29주년 정의연 “피해자 존엄 위한 판결 기대”, 연합뉴스, 2021년 1월 6일, <http://www.yna.co.kr/view/AkR20210106104900004?input=1195m>, (2021년 1월 7일 검색).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kr/>.